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주민돌봄시설로 활용하자”

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 연구회 개최 ‘빈집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서 제기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대표의원 이병도)가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빈집 관리·활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전주대학교 김준영 교수(건축학과)와 연구진,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김준영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가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빈집 관리·활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집구역 현황 조사 ▲빈집 관리·활용 관련 제도 및 우수사례 분석, ▲도민 인식조사 결과,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제안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빈집 밀집도 및 주택유형별·등급별 분석을 통해 빈집을 유형화했고 빈집에 신설, 양도소득세 감면 등 빈집 세제 개편 방안과 지자체에서 빈집을 매입·위탁해 박물관, 체험관, 주민돌봄시설, 지역수업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유형에 맞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병도 대표의원은 “그동안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관련 정책은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빈집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빈집을 공유주택, 창업·커뮤니티 공간, 안심쉼터, 로컬컨텐츠 여행상품 등 지역의 자산으로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는 이병도, 최영규, 이정린, 오평근, 김병지, 최진욱, 조동용, 한완수, 김이재, 성경찬, 이병철, 김철수의 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호상 기자

자발적 빈집 철거시 재산세·양도소득세를 경감

윤준병 의원 ‘빈집 철거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

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할 때 재산세 30%를 경감하고,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원 9명 ‘우수의정 대상’

국주영은·김대중·정호운·최영규·최영일 황의탁·오평근·한완수·김종식 도의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 김대중(정읍), 김종식(군산), 오평근(전주), 정호운(전주), 최영규(익산), 최영일(순창),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의가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

넓히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상패는 13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전달됐다. 우수의정 대상 수상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맡아왔다”며 “또, 내년부터 주민자치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지우 의장은 의원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민생을 살피고 도민을 대변하는 활동에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의가 의정활동이 돋보인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며,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 지평을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 9명이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의가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간호사 시·군별 편차 심각”

이정린 도의원, 도립 간호대학 설립 추진 촉구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도내 시·군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도립 간호대학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3일 제3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시·군별 간호사 현황분석과 함께, 지역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간호사 1명당 담당 인구를 분석한 결과, 평균 100명으로 전주시는 간호사 1명이 인구 80명을 간호한 반면, 정수군은 무려 357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수군 인구 약 2만명에 등록된 간호사 수는 단 62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 역시 간호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더 큰 문제는 도



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간호사가 부족한 군 지역의 경우, 대부분 사설병원 출신의 간호조무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간호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업무과중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대도시나 수도권을 선호하다보니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은 더욱더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지역에서 스스로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시·도의 경우 지역의 도립대학 내에 간호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은 도립대학 자체가 없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도립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다.

이정린 의원은 지역 간호인력 수급이 시급한 만큼 현재 방치되고 있는 서남대 폐교부지에 도립간호대 설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도립대 설립에 따른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현재까지 지역간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이나, 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황으로, 간호인력 수급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부터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도의회 최초로 도립간호대 설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만큼, 앞으로 추진 여부와 시점에 대한 전북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 국가예산 반납액 과다... 적극재정 집행을”

김종식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의원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제3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버금가는 국가 예산 적극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전북발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이 집행부에게 돌아간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을 유념해 적극 재정집행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당부를 특별히 더 드리는 이유에 대해 어렵사리 확보



한 국가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이 반납한 국가예산이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목소리가 예산철 마다 나오고,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를 알리는 보도가 간간히 나오지만, 쓰지도 못한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수백억원의 국비 반납

이 향후 정작 중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14개 시·군 뿐만이 아니라, 전북도가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도가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약 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의원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분명 철저한 집행과 성과를 내겠다고 해마다 설명해 왔다”면서 “전북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국가예산 등의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해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자”

김만기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이 13일 제3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를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메일 한 통 전송에 4g 내외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수신확인 후 삭제하지 않은 이메일이 누적될수록 데이터 유지를 위해 전력 소모가 늘고, 탄소 발생량도 함께 증가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전 직원을 동참하게 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운동을 통해 348만 메가바이트(MB)를 삭제함으로써 38톤(t)의 탄소를 감축해 5,7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지난해 12월 10일) 1주년을 맞아 범부처 차원으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챌린지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 디지털 탄소다이어트(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 위한 전북대표도서관 기능 보강을”

강용구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이 2024년 건립 예정인 전북대표도서관에 농인전문 도서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형 맞춤형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건립예정인 전북대표도서관에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형 맞춤형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서관법 제43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구 의원은 “도내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다음으로 높지만, 도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과 지식정보 서비스는 아직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68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 자료실이나 장애인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소수에 불과하고, 장애인 전문도

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유일하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1억5,000여만 원이었지만, 2017년 무려 38.9%나 감소했고, 5년 이 지난 2020년 예산은 8,5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는 2024년 건립 예정인 전북대표도서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전북대표도서관이 전북은 물론, 전국 모든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기능보강, ▲청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형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기능보강, ▲도내 도서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과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 정보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